

전남대 교수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교수 107명 동참... “하야 촉구” 전국 5번째, 광주·전남서 처음 “尹 국정농단·권력사유화” 주장 특검 수용 결과 따라 확산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하야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가천대·한국외대·한양대·인천대에 이어 다섯번째 교수 시국선언이다.

전남대 교수 107명은 6일 ‘국정 파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대일 굴종 외교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렸다”

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명태군 게이트’와 관련 윤 대통령의 대선과 총선 과정에 여론조작과 공천개입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국정농단’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군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총선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부부 내외와 명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위선 개입 사건 등 대통령 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정치검찰을 앞세워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다. 국가의 원수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자신과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정치검찰이 국정 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정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해 실제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 국민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전남대학교는 지난 2016년에도 교수 200여명이 힘을 모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전남대 시국선언 일동은 7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기자회견’과 특검 수용 결과에 따라 호남 전체 대학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 시국선언을 확산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북구, 가로수길 낙엽 수거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6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가로수길에서 전통 송풍기를 이용해 인도에 쌓인 낙엽을 수거하고 있다. 나한호 기자

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성매매한 40대 “전염성 낮다” 주장

공소 사실 인정하며 선처 호소

감염 우려가 있는 성병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임도구를 사용해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10대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해당 성병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으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고 당시 피임도구를 착용해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에 있어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공판 기일을 한번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현기 기자

한국전쟁 시기 함평·영암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적대세력 지역주민 총 85명 학살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한국전쟁 전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함평군 주민들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

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된 사건 10건(10명)에 대해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를 진행했고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함평군 손불면·신광면·대동면·해보면·월야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10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함평경찰 및 관할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드러났다.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11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영암군 주민들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

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전남 영암군 군서면, 덕진면, 금정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75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농업을 하던 남성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10~6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다.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정성아 기자

이제는 혼자서도 단단하게 떠나자

JIN AIR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도쿄 진에어(JI)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팀(1인 ¥3,000), 매니팅,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